

#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신고법' 만든다

###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되면 1천만원 이상 보유 암호화폐 신고해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 19일, 공직자의 재산공개 항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공직자 비트코인 보유현황 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를 접수 받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최근 재산 증식 수단으로 급부상한 암호화폐가 제외되어 있어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신고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가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거짓 기재 혹은 중대한 과실로 생략,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의거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도 암호화폐를 통한 재산증식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신고법' 공직자윤

리법 개정안은 정동영 의원(대표발의), 권은희 박주현 윤영일, 이찬열 장정숙 천정배 의원(이상 국민의당), 김두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인숙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김중대, 윤소하 의원(이상 정의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동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원내 4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꼭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국민의당 개혁신당과 내달 6일 중앙당 창당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의 개혁신당 창당이 단계별 절차를 밟으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이날 28일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에 이어 다음달 6일 중앙당 창당 계획을 잡고 있다.

개혁신당과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혁신당창당추진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앞서 알려진대로 개혁신당창당추진위원회(창추위)의 대표는 조배숙 의원이, 창추위 산하 창당기획단장은 김경진 의원이 맡기로 했다.

창추위는 창당기획단과 총무위, 조직위, 홍보위, 정당정책위, 당헌당기위 등 6개 위원회와 여성, 청년, 노인 등 3개 특위로 구성된다. 이중 조직분과위원장은 김중희 의원이, 정당정책위원장은 윤영일 의원이 맡는 것으로 창추위는 결의했다.

이들은 또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머지 위원회 위원장 인선 등 창당 로드맵을 밝힐 계획이다.

최 의원은 "내달 6일 중앙당을 창당하는 것으로 잠정 일정을 잡았다"며 "당명은 당원 의견을 수렴키로 했는데 민주평화당, 평화민주당, 국민개혁당, 평화개혁당, 개혁신당 국민속으로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발기인, 당원 모집을 진행해야 한다. 200명 이상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은 당연직으로 하고 당원직 추천으로 발기인을 정하기로 했다. 당원 모집은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 모집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창추위의 전신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결성 당시 1차 목표를 통한 전당대회 지지, 2차 목표를 개혁신당 창당으로 세웠다. 개혁신당 창당에 속도가 붙은 상황임에도 아직 통합 전당대회 지지라는 1차 목표를 내려놓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전당대회 지지는 가처분 신청이 하나의 방법"이라며 "전당대회에 참여해서 통합 안건을 부결시키지는 의견도 있고 일부에서는 이에 참여를 안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직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전당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통합은 찬성하지만 절차에 반대하는 지역위원장들의 모임은 개혁신당과 협력해 전당대회에 참여 후 통합안건을 부결시키지는 얘기 전해왔다. 안 대표 측의 지역위원장들도 중요하고 축소되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고도 했다.

/뉴시스

### '문재인 공산주의자' 비방 선언회 구청장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방글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강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19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일 검찰로부터 같은 혐의를 구형받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고일이었던 같은 달 22일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변론을 재개하면서 이날 다시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기존대로 징역 1년의 실형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 측은 문 후보를 가리켜 쓴 표현인 '공산주의자' 등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주장을 첫 공판 때부터 강조해왔다. 변호인은 이날 "특정인이 파시스트라는 발언은 자의적 해석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미연방 항소법원 판결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산주의자의 정의는 명확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민사 소송 중인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의 1심은 '해당 발언은 문 후보에 대한 과장된 정치적 수사, 의견, 논평 표현의 차이를 넘어 진의를 가릴 단정적 표현'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신 구청장은 2016~2017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당시 아권 유력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또는 비방이 담긴 글을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허위 비방글에는 문 대통령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대통령의 부친이 북한공산당인민회의 총납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신 구청장의 1심 선고를 내린다.

/뉴시스



한국노총 지도부와 오찬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와 오찬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정두언 "MB,朴정부 10배 악랄한 블랙리스트 있어"

"권재진·이영호 압박하면 얘기 나눌지 몰라"... "MB 선거 과정서 경천동지할 고비 세 번"

정두언 전 의원은 19일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과 관련해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우리가 간파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악랄한 블랙리스트"라고 폭로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MB에 대해서 비판했던 지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했던 것이 민간인 사찰이었다"고 부연했다.

정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분개하는데 이전 그것의 10배 해당하는 블랙리스트"라며 "비행하고 별짓을 다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 검찰의) 특별비 수사는 특히 민간인 사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대서관이 받았던 돈이 그 당시 민간인 사찰과 재원이 벌어질 때 무마용으로 많이 쓰여졌다는 것이고 그때 다 MB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을 덮기 위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순 영터리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다시 하다 보면 그 당시 민정수사였던 권재진 전 장관이나 이영호 전 고용노동부차관 등이 다시 나온다"며 "그들에 대해 다시 압박을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졌다. 사실 고비가 세 번이나 있었다"며 "경천동지할 일들이 벌어졌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그것은 죽기 전에 말할 수 있는 일"이라며 "(대선과정에서) 벌일이 다 벌어지는데 그런 걸 헤쳐 나왔다. 그런데 그 후유증이 대통령(당선) 후까지 간다.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며 더 이상 말을 삼갔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가능성과 관련해 "(검찰 포터라)에 설 것"이라며 "정권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누가 말리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뉴시스

### 민주당,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위해 각 시도당에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김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한 시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민주당 당헌당규상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원의 100분의 50이상은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 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심의 의결 권한을 당대표에게 위임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믿음과 희망을 주는 열린의회
시민의 생각이 의회의 생각

## 김제시의회는

###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쌍용

아리암문학마을

벽골제 장생기

김제 시의회  
GIMJE CITY COUNCIL